

기고

하수철 순천소방서 서장



안전(安全)이 효용(效用)이라면

요즘 소비 트렌드(trend)는 '가성비'(가격대비성능의 줄임말)다. 10대~20대 젊은 층의 소비를 시작으로 이제는 사회 전 연령층으로 번지고 있는 소비습관이다. 기업은 매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는 이에 자극받아 한정된 지출에 산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니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닐까.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Smith)는 말했다. 모든 인간이 동기 여하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법칙에 지배되는 합리적인 인간(經濟人)이라면 사회의 부가 극대화된다고. 물론 그 가정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며, 경제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모델(model)일 뿐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이 지향적으로 두고 근접해 간다면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개선을 이룰 수 있

지 않을까?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의 성능과 가격은 외면한 채 구매했던 과거에 비하면 '가성비' 소비 풍조 또한 경제적으로 진일보한 소비생활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소비할 때마다 실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안전(安全)이 효용(benefit)이라면 어떤 제품을 사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 소방시설은 다양하다. 소화기부터 건물규모에 따라 수 천만원 그 이상에 이르는 소화설비까지 말이다. 모든 건물에 고가의 소방시설을 구비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비용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국의 각 일선 소방서는 매년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소화기와 감지기, 즉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安全)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정책이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7.8%는 주택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55%는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주택화재 사망자수를 15%씩 줄여나가 '24년 이후에는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IoT 기반 마을단위 안전시스템 구축 ▲민관 공동 화재안전 종합컨설팅 ▲소규모 주택 현장대응 기법 개발 ▲단독주택 밀집지역 소방활동 정보 조사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 운영 등 예방·대응·홍보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 하지만 주택거주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있는 일일까? 소방청에서 정책들을 시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거주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시간'이라는 비용이 들게 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는 15,000원(온라인쇼핑몰가격), 감지기는 5,500원(온라인쇼핑몰가격)이다. 약 2만원의 비용을 투자하면 소방청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안전(安全)이라는 효용의 70%는 누릴 수 있다. 이보다 더한 가성비 제품이 있을까?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소화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감지기는 화재시 경보를 울려 본인 가족은 물론 이웃사람을 대피하게끔 할 수 있다. 소화기로 재산피해를 줄이고, 경보기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안전(安全), 소방사에서 쓰이는 경대 구호이기도 하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본인의 안전도 지키겠다는 상관에 대한 다짐이다.

이런 열망과 사명감이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작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고

축사화재 사전 예방활동이 최선

최근 전국 곳곳의 축사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축사는 주거시설과 많이 떨어져 있어 화재가 발생해 확대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고 건축자재 또한 부직포나 비닐하우스이며 볏짚이나 건조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적치돼 있고 전기시설 노후화 등 화재 발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대부분 축사가 마을 외지에 위치해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으며 진입로의 협소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워 화재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소방서는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축사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전기 관련 시설의 점검 등은 필히 전문 업체에 의뢰해 먼저 축사 내 노후 전기배선을 교체하고 콘센트 등을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축사 안에서 사용하는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지 않는다.

셋째로 축사 보수를 위해 용접·절단 시에는 용접 불티에 의해 볏짚 등 가연물에 옮겨붙어 많이 발생하므로 소화수와 소화기 등을 비치해 화재에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사관리자의 자율방화의식 고취인데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 어느 건축물보다도 화재에 취약하고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출동 시 축사 전체를 소실하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화재는 항상 방심한 가운데 발생하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모두가 사고 없는 안전한 축사 농가를 만들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유철/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소방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도시부 속도관리'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OECD에서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이 속도 하향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h로 제한, 주택가 등 주거상가 인접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는 시속 60km/h로 제한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속도 하향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독일, 호주 등의 주요 국가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발견할 수가 있다.

도시부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 2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15.8% 감소하였고, 보행 사망자 수는 33.8%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도시에서 13.4km를 이동할 때 통행시간은 약 2분 지연

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속도 5030'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출·퇴근길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행 운전해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좌우를 더욱 잘 살피고 보행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의 감속과 방어운전을 통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조유빈/나주경찰서경무계경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가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